



주간통일정세 2011-07(2011.02.07~02.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0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김정일 설연휴 활발한 행보…건재 과시(2/7,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설 전날까지 군부대 시찰, 의학연구소 현지지도, 은하수 ‘설명절음악회’ 관람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침.
  - 지난해 설을 전후로 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은하수 ‘설명절음악회’ 관람이 전부였고, 2009년에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 공연 이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설 연휴 행보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셈임.
  
- **北 식량난에도 김정일 생일 준비 ‘쟁결음’(2/9, 연합뉴스)**
  - 열악한 식량사정으로 외부지원에 목마른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을 앞두고 올해도 행사 준비에 분주함.
  - 올해는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동을 건 상황이라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지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전망
  -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일찌감치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 준비 소식을 알렸음.
  - 평양방송은 1월13일 김 위원장의 생가인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으로 올해 첫 답사행군이 시작됐다면서 양강도에서만 수만 명의 중학교 졸업반 학생이 고향집으로 답사길에 나섰다고 전함.
  - 또 이달 중순부터 평양을 포함해 각 도에서 ‘제15차 김정일화(花)축전’을 열기 위해 사전작업에 한창이라고 보도
  - 또 보통강변의 빙상관에서는 ‘백두산상국제휘거(피겨)축전’이, 평양창광원 수영관에서는 ‘2.16경축 수중발레모범출연’이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경축공연과 체육경기대회가 마련되는 등 갖가지 기념행사가 줄을 이음.
  - 러시아와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도 예년과 같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열린북한방송도 후계자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부친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정일봉 축포행사’의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다고 보도



- **北김정일·정은, 호위사령부 공연 관람(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제963군부대(호위사령부 별칭)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 3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관람 이후 7일 만임.
  - 공연에는 '발걸음(남성중창)', '조선의 2월(선동시)',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합창)' 등이 올려졌는데, '발걸음'은 지난 달 31일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종업원의 예술소조공연에도 올려져, 주요 공연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음.
  - 김정은 외에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박도춘(당 비서)·문경덕(당 비서 및 평양시 당 책임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인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윤정린(호위사령관), 국방위 국장인 현철해·리명수 이 수행
  -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6시와 7시 정각에 각각 공연 관람 소식을 보도하면서 '발걸음(남성중창)'을 포함한 공연 목록을 전하며, 오전 8시45분 이 같은 중앙방송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기사를 다시 송고, 중앙통신이 기사를 이례적으로 재전송한 것은 '발걸음' 공연사실을 추가로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칠순 앞두고 北 우상화 주력(2/1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은 생일행사 준비에 매진하며 김 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근로자와 학생들이 김 위원장 생일을 맞아 백두산 밀영의 생가를 답사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경축모임을 열고 축하공연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전함.
  - 8일부터는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돼 농구와 배구, 탁구, 빙상호케이(아이스하키), 스키 등 1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생일 기념우표가 발행되고 김 위원장 탄생기념 단편소설집이 발간되는 등 각 부문에서 우상화 작업이 활발하다고 보도
  - 지금까지 북한 매체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번엔 살펴보면 하는 행사의 종류나 생일 관련 보도 건수는 관과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으로 권력 지형에 변화가 일면서 내부적 결속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올이변생일 행사의 나 는 전련 보도질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옴.



● **북한·중국 치안총수 평양서 회담(2/13,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중국의 명젠주(孟建柱, 63) 국무위원 겸 공안 부장이 13일 평양에서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회담을 했고, 2박 3일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힘.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주 부장과 최중화 인민보안부 부부장 등이, 중국측에서 명 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
-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힘.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2/7 광범기(함남 당책/기념 보고) 참가下 함흥대극장에서 진행(2/8, 중방)
- 김정일 생일 관련 ‘신선로요리경연(전국 25개 단위 참가, 2/22-24 최종경연)’ 진행과 태양절 즈음 ‘명절요리축전, 전국요리기술경연, 지방 특산요리경연, 양어물고기요리기술경연, 바닷물고기요리기술경연’ 예고(2/8, 민주조선)

나. 경제

● **‘세계적 식량난·물가폭등’ 北 연일 보도(2/8, 연합뉴스)**

-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현지 매체들이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물가폭등, 에너지난이 심각하다고 잇따라 전해 눈길을 끄.
- 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도 내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 조선중앙방송은 8일 “유럽동맹(EU) 성원국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 있다”며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 성원국들에서 지난해 12월 도매가격이 그전 같은달에 비해 5.3% 또 인상됐다”고 보도
- 평양방송도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원국들에서 지난해 12월 에너지 가격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8.3% 인상됐다”고 전함.

● **北 무역상 베이징서만 1천명 외화벌이(2/9, 아사히신문)**

- 국제적인 제재로 고립된 북한이 식량 조달 등을 위해 중국에 무역상인을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은 정부 각 부처와 군 산하에 300개 정도의 무역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 파견한 무역상은 베이징에 약 1천명, 상하이에 약 600명,



- 지방 거점 도시별로 100~200명씩임. 이들 무역상은 거래를 통해 번 돈을 1인당 연간 5천~6만 달러 정도 본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거래비용이나 생활비에 충당
- 한편 신문은 북한 당국이 작년 후반 석탄과 은 등의 광물자원 수출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쌀과 옥수수 수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최근엔 규제를 완화해 대량의 광물을 방출하고 있음.
- **北 수력발전사업 통해 탄소사업 본격화(2/9, 자유아시아방송(REF))**
- 북한이 독일의 감리전문회사에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 한스자이텔 재단의 베른하르트 켈리거 한국사무소장은 “독일의 대형 감리회사인 투에프 노드(TUEV Nord)가 북한이 함경남도 지역에 추진 중인 수력발전소 개발사업 3~4개가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적합한지 감사하기로 했다”며 “이는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해 선진국이나 민간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전함.
- **北, 중국산 사료용 쌀 식용으로 수입(2/9, 자유아시아방송(RFA))**
-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사료용으로 쓰이는 중국산 저질 쌀을 식용으로 위장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이 중국산 사료용 쌀을 수입해 군부대뿐 아니라 ‘장마당(시장)’에 식용으로 대량 공급하는 바람에 최근 식량가격과 환율이 급락했다”고 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말부터 세관을 통해 중국산 ‘막대쌀’이 대거 들어와 군부대와 (건설)돌격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며 “‘막대쌀’은 포대에 나무막대기 모양의 상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리는 사료용 저질 쌀로, 일반 쌀에 비해 빛깔이 검고 겨와 돌이 많이 섞여 있어 밥맛도 없다”고 방송에 말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일반 쌀은 중국에서 한 포대(25kg)에 인민폐 120위안 이상인데 지금 들어오는 사료용 쌀은 한 포대에 75위안에 불과하다”며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 중에 좋은 것은 모두 밀수된 것이고 나쁜 것은 세관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함.
- **식량난 직면 北, 지하자원 개발 ‘안간힘’(2/9, 연합뉴스)**
-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 감소와 국제사회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지하자원 수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합작 개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 함경북도 경원군의 탄광과 온성군 동(銅)광산 개발을 추진 중임.
  - 연변(延邊)의 한 기업이 이미 2009년 북한 조선승리경제무역연합회사와 탄광 합작 개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북한 중앙



당국으로부터 합영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업체는 1천500만 달러를 들여 경원 탄광에서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며, 또 북한의 제의에 따라 동 2억4천만t, 폴리브덴 1만 2천t, 황금과 은이 각각 49t, 146t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성군 강안리의 대규모 동광산 개발도 검토 중임.

- 중국의 중건 철광그룹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북한 최대 규모인 양강도 해산의 광산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2006년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 채광 설비 제작에 나섰다 2009년 7월 설비 제조를 중단, 광산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의 갈등설이 흘러나왔으나 북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개발을 재개했다고 전함.

● **美, 회사명 바꿔 거래한 北기업 적발(2/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한 무기수출업체가 서류상 이름을 바꿔 금융제재를 피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금지명단(SDN List)을 수정했다고 보도
- “북한의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이 된 이후 이미 알려진 한글과 영문 이름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외에도 청송연합무역회사, 조선차원개발투자회사, 진달래, 금해령 유한책임회사, 자원개발과 투자사, 생필사 등 총 8개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 재무부가 이를 파악하고 거래금지 명단에 6개의 이름을 추가했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의 절반 이상을 제3국에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에 사용됐던 어뢰와 같은 종류의 어뢰도 수출한 회사로 알려짐.

● **北 작년 홍수 농업피해 과거보다 작아(2/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내놓았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작년 9월12일부터 23일까지 하루 평균 30mm의 비가 내렸고, 9월1일과 2일 이틀 사이엔 하루 평균 75mm의 폭우가 쏟아져 경작지 3만550ha가 물에 잠겼다고 전함.
- 이는 1996년 7월 닥새간 집중호우로 28만8천ha가 침수됐던 것이나 2007년 8월 1주일간 26만8천ha가 물에 잠겼던 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덜한 것이라고 전함.

● **中 동북 13개 도시 경제특구 추진(2/13, 미국의 소리(VOA))**

- VOA는 중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믹 옵서버’를 인용해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허강(鶴崗)시와 자무스(佳木斯)시, 지린(吉林)성 지린(吉林)시와 연변 조선족자치주, 랴오닝(遼寧)성의 단둥(丹東)시와 다롄(大連)시 등 13개 도시가 경제특구 건설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고 전환.

-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말 열린 동북 지역 도시들의 원탁회의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지린대 교수들에게 사전조사 및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의뢰한 상태
- 이 계획을 추진하는 기구인 ‘동북지방 지역협력 비서국’도 구성됐으며, 올해 안에 사무실 공사가 끝나면 13개 도시에서 관계자 1명씩 파견해 북한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보도

#### ■ 기타 (대내 경제)

- 금속공업부문 공업총생산액 106%, 임업성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146% 및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10% 등 1월 계획 초과달성 보도(2/6, 중방)
- 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홍남비료연합기업소, 2/7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2/8, 중방)

### 다. 군사

#### ● 북한군 核 관련 부대서 집단 작업거부(2/8, NK지식인연대)

-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131지도국 47여단에서 지난달 17일께 굶주린 군인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작업명령을 거부했다”며 “군 보위사령부가 현장에 나가 ‘반란’을 진압했고 해당 부대 간부들이 줄줄이 처벌받았다”고 밝힘.
- 노동당 군수공업부 직속부대인 131지도국은 10여 개 핵무기개발 연구소를 관리하면서 핵무기 생산계획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47여단은 우리놈 광석을 캐는 부대로 알려짐.
- 또 “함경남도 영광군에 주둔하는 특수부대인 경보교도지도국 108부대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평양과 청진을 잇는 인근 도로에서 행인과 차량을 약탈하고 있다”고 덧붙임.

#### ● 샤프, 북한군 특수부대 20만명 규모(2/9, 연합뉴스)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북한군의 특수부대 전력이 20만명에 달하며 이 중 특수작전부대와 경보병이 각각 6만명과 14만명이며,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로 평가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여야 국방위원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국방위원들이 전함.

#### ● 北특수전부대 혹독한 ‘지옥훈련’으로 무장(2/13, 연합뉴스)

-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로 기습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는 목적의 북한 특수전부대(경보병부대)는 우리 특전부대에 못지않



- 은 혹독한 지옥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특수전부대는 경비병부대 14만명과 11군단 (폭풍군단) 및 인민군 정찰총국 예하 특수작전 전문 병력 6만여명 등 20만여명으로 구성
- 14만명은 전방사단의 경비병연대 병력들이며, 11군단 예하 5만여명과 정찰총국 예하 1만여명 등 6만여명은 ‘인간 병기’로 불리며 특수작전을 전문으로 함.
- 11군단 예하에는 4개의 경비병여단과 3개의 해상저격여단, 3개의 항공육전단 등이 편성됐고 항공육전단 내에는 여군으로만 구성된 여성정찰중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과거 여군만의 ‘목련꽃 소대’가 있었으나 여성정찰중대로 개편됐다고 하며, 공군저격여단과 해상정찰대대도 편성되어 있음.
- 특수전부대는 하계(6월 중순~8월 초), 동계(12월~2월 중순)로 나눠 35kg 군장꾸러 40km 12시간 주파 훈련, 3일연속 천리행군, 부대원 특공무술 시합 등을 함.

#### 라. 사회·문화

##### ● 1월 평양 ‘꽁꽁’…66년만에 기록적인 한파(2/9,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매일 아침 북한의 날씨를 전하는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종합해본 결과, 1월 평양의 평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1도를 기록
- 가장 추웠던 지난 1월 1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고, 1월을 통틀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위로 올라간 적도 9일(영하 9도), 14일(영하 6도) 단 두 차례, 낮 최고기온은 1월 내내 단 한 번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함.
-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2일 “낮 최고기온이나 아침 최저기온 모두 평년보다 심히 낮아진 상태가 계속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계속되는 추위가 인민생활과 봄철 영농준비 사업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함.

##### ● 北 청암동 토성서 고구려 유적 발굴(2/9, 조선신보)

- 북한의 국보 제9호인 청암동 토성(평양시 대성구역)에서 고구려 시기의 순찰도로와 해자(壕子, 방어형 도랑)가 새로 발굴된 것으로 전해짐.
- 최근 청암동 토성의 성벽 밖에서 판석으로 포장된 너비 1.8m, 길이 20m 구간의 도로 시설이 발견됨.

##### ● 백두산 천지 지각변동 작년과 차이 없어(2/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천지 일대의 지각변동과 얼음 상태가 지난해와 차이가 없고 동물의 활동도 정





상”이라고 보도

- 이 신문은 ‘백두산 천지 종합탐험 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천지의) 흰 눈 덮인 두터운 얼음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감을 뿜어올리는 백두온천도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北, 구제역 발생 확인…전국에 비상방역 선포(2/10, 조선중앙통신)

- 전역에 구제역 발생해 소와 돼지 1만여 마리가 감염됐으며 국가수의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비상방역’이 선포됐다고 밝힘.
- “지난해 말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8개의 도에 전파됐다”며 “그중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라고 소개
- 또 “이 지역의 협동농장과 젖소목장, 돼지목장에서는 구제역 O형이 발생해 지금까지 부립소(일소)와 젖소, 돼지 1만여마리가 감염되고 수 천마리가 폐사했다”며 “내각 부총리 김락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돼 전국에 비상방역이 선포됐다”고 말함.

● 北, 구제역 발생 FAO에 통보(2/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고 보도
- 유엔 관계자는 “북한 농업성이 9일 외교 서한을 통해 FAO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전격 통보하고 긴급 구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함.
- 그러나 북한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나 감염된 소와 돼지의 수 등 구체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10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돼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집짐승이 315만마리가 넘고, 조류독감으로 540만마리의 닭·오리 등이 도살처분됐다”고 전했다지만 북한내 구제역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아직 확인 중이지만 첩보 등을 종합해보면 관련 보도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함.
- \* FAO가 북한의 구제역 긴급 구호 요청에 따라 다음주 수의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11일 RFA가 보도

● 北 작년 성탄절에 첫 구제역 발생(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북한에서 받은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12월 25일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소 6마리가 처음으로 구제역에 걸



렸으며 사흘 뒤에는 평양북도 태천군에서 돼지 3천900여마리와 소 2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됐으며, 북한이 자체 개발한 백신은 효과가 없었다고 보도

- 지금까지 돼지 1만여마리와 소 1천여마리, 염소 165마리가 전염됐으며 이 가운데 돼지 8천640여마리와 소 15마리가 죽었고, 폐사되거나 매몰된 가축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7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1,2부)' 시사회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2/7,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 생일(2/16) 즈음 새 우표(개별우표 4종) 발행(2/7, 중통)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2/8 강능수(내각부총리), 박명철(체육상)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8, 중통)
-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北선수단, 2/10 귀국(2/10, 평방)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조선신보, 이집트 '反 무바라크' 시위 언급(2/7, 조선신보)**
  - 최근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근로인민대중이야말로 역사의 주체이며 반미자주화야말로 시대의 기본흐름임을 또다시 힘있게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언급
  - 북한 현지 매체들은 튀니지와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음.
  - 조선신보는 '료원(요원)의 불길처럼'이라는 글에서 이집트를 '친미 국가'로 낙인 찍으면서 이같이 주장
- **유엔, 내주 북한에 식량난 실태 조사단 파견(2/11,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음.
  - WFP의 그렉 바로우 대변인은 11일 “FAO와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공동 조사단의 활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3월 6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조사는 지난해 WFP와 FAO가 북한을 방문한 결과 올 겨울의 혹한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올해 50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를 맞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임.



-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단 파견이 북한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한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양만큼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돼 단기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명젠주 중국公安부장 평양 도착(2/13, 조선중앙통신)**

- 중국 국무위원인 명젠주(孟建柱)公安부장과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나, 방북 목적 및 일정은 밝히지 않음.

나. 6자회담(북핵)

● **이란, 농축우라늄 대가 北에 20억불 제공(2/10, 산케이신문)**

-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제공하는 대신 원심분리기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2008년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 3차례에 걸쳐 20억 달러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전함.

● **美의회, 성급한 6자회담 재개 안된다(2/10, 연합뉴스)**

- 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존 카일 의원과 국방위 소속의 존 매케인 의원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3명은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가 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북한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6자회담 재개에 나서지 말라달라고 전함.

### 3. 대남정세

● **北 주민 31명 어선 타고 연평도로 월남(2/7,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7일 “황해도 남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고기잡이 어선이 연평도로 넘어와 군 당국이 예인 조치했다”며 “어선에는 남자 11명, 여자 2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힘.
- 합참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31명이 탄 어선(5t, 동력선) 1척이 연평도 북방에서 NLL 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군 고속편대가 출동해 NLL 남방 1.6마일 지점에서 검문검색한 뒤 예인조치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아직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월남은 2002년 8월 19일 2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로 귀순한 데 이어 2009년 10월 1일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이후 처음임.



## [2000년대 이후 귀순일지]

- ▲ 2000.1.13 = 주민 1명 제3국에 체류하다 밀입국한 뒤 귀순
- ▲ 2000.4.6 = 주민 2명 제3국 통해 밀입국한 뒤 귀순
- ▲ 2002.7.31 = 주민 1명 서해 우도지역에서 0.3t짜리 전마선 타고 귀순
- ▲ 2002.8.19 = 주민 21명(세 가족) 어선 타고 북한 탈출해 서해로 귀순
- ▲ 2003.4.6 = 일가족 3명 전마선 타고 북한 탈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앞바다 통해 귀순
- ▲ 2003.7.4 = 주민 2명 전마선 타고 서해로 귀순
- ▲ 2005.6.17 = 40대 부부 전마선 타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부근에서 표류 중 우리 군경에 발견된 뒤 귀순
- ▲ 2005.6.26 = 주민 3명 전마선 타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부근에서 귀순
- ▲ 2005.9.6 = 주민 2명 전마선 타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으로 넘어옴. 1명 귀순, 다른 1명은 북한 귀환
- ▲ 2006.3.19 = 주민 일가족 등 5명 전마선 타고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 통해 귀순
- ▲ 2006.4.17 = 주민 1명 전마선 타고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 통해 귀순
- ▲ 2007.3.20 = 경상북도 울릉군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주민 1명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선적 동진호에 귀순의사를 밝힌 뒤 귀순
- ▲ 2007.4.28 = 주민 4명 전마선 타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 통해 귀순
- ▲ 2008.6.15 = 주민 2명 전마선 타고 서해 소청도 앞 해상 통해 귀순
- ▲ 2008.12.30 = 일가족 4명 소형선박 타고 서해로 귀순
- ▲ 2009.10.1 = 주민 11명 전마선 타고 동해로 귀순
- ▲ 2010.6.1 = 주민 1명 전마선 타고 서해로 귀순
- ▲ 2010.6.24 = 주민 1명 전마선 타고 서해로 귀순
- ▲ 2010.6.26 = 주민 2명 전마선 타고 동해로 귀순
- ▲ 2010.9.20 = 주민 4명 울릉도 주변서 표류 중 구조. 3명은 귀순, 1명은 북한 귀환
- ▲ 2011.2.5 = 주민 31명 어선 타고 서해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 합동신문팀 조사 중

● 北, 남하 주민 31명, 선박 송환 요구(2/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여성 20명, 남성 11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고 통일부가 8일 밝힘.
-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 31명에 대해 남측 관계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결과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으며, 대북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이 이날 오후 4시께 하는 북측과의 마감통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 정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적 동의(2/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북측이 제의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함.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20분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보냈다”고 밝힘.
- 이 부대변인은 “(적십자회담의)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해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을 (전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 이어 “실제 적십자회담 개최 여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
- 정부의 적십자회담 원칙적 동의는 북측이 지난 1월10일과 2월1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해온 데 따른 화답임.

### ● 남북 군사실무회담서 본회담 의제 합의 못해(2/8, 연합뉴스)

-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대령급 실무(예비) 회담을 갖고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국방부에 따르면 8일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7시10분까지 9시간 이상 이어졌으나 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측은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함.
- 남측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관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북측은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제시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천안함과 연평도, 상호신뢰구축이라는 3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자는 견해를 보임.
-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대장)과 총참모장(차수)’으로 제기했고 북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대장 및 상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대장 및 상장)'으로 맞섬.

- 이날 실무회담에 우리 측은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외 2명이,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인 리선권 대좌(대령급) 외 2명이 각각 참석
- 대령급 실무회담은 작년 9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임.

### ● 군사실무(예비)회담 결렬... 회담의제 합의 못해(2/9,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예비회담이 끝나고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50분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20분에 다시 시작됐으나 속개 10여분 만에 종료됐다”고 밝힘. 즉, 남북 양측은 전날에 이어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급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
- 김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은 오후 2시50분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수도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회담) 결렬이다”라고 함.
-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연평도와 천안함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했고 북한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자고 한다”고 설명
-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의 급도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됨. 군 관계자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장관 혹은 합참의장)이 회담 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북한은 차관급인 부부장(상장 혹은 대장)이나 부참모장(상장 혹은 대장)을 대표로 하자고 했다”며 “북한에는 부부장이 7명, 부참모장이 5명이나 되는데 우리로서는 책임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힘.
- 예비회담에도 남측은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외 2명이,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인 리선권 대좌(대령급) 외 2명이 전날에 이어 참석
- \* 남측 수석대표인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회담 분위기는 어제뿐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도 실무적으로 차분히 진행됐다”며 “그러나 오후에는 북측이 작심한 듯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회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전함. 또한 이후 계속된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것으로 수정 제의했고, 북측도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데 대하여로 수정했으며 그것까지는 진전됐다”고 전함.

### ● 북한군, 南과 더이상 상종 필요 느끼지 않아(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역적패당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상종할 필요



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공보’를 통해 “이번 예비회담은 본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나 간단히 협의확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예상 외로 무려 이틀 동안에 걸쳐 7차례나 휴회를 거듭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렬됐다”며 실무회담에서 오간 내용을 자세히 언급, “겉으로는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흉내를 내고 속으로는 북남대화 자체를 거부해 6자회담 재개와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대화 흐름을 막고 대결과 충돌국면을 지속시켜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무마시켜보려는 것이 역적패당의 흉악한 속내”라며 이같이 밝힘.
- \* 북한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공보’라는 형식을 취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임.
- \* 북한은 성명이나 담화, 중앙통신기자화 문답, 비망록, 상보, 기자회견, 보도, 호소문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 대내외에 입장을 밝히는 데 그동안 ‘공보’를 쓴 적은 거의 없었음. 지난 10년간 북한 매체의 보도를 살펴봐도 지난해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당시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를 내고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선거를 했다는 소식을 알렸던 것이 유일

#### ● 北, 회담결렬 南비난 잇달아…주민까지 동원((2/10,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통신은 ‘첫 시작부터 드러난 회담파괴자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의제설정은 회담에서 무조건적인 첫 순서로 의제에 대한 태도는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북남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의제부터 비현실적인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밝힘.
- 중앙계급교양관 김선희 강사는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당치 않은 구실을 들고나온 남측의 고의적인 대화 파탄 흥계 때문”이라며 “현실은 남측이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을 차단하면서 의연히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 ● 北매체, 南, 성실한 자세로 대화 나서야(2/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예비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시킨 비열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 아량에 대해 오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대결자세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의 마당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여전히 고위급 군사회담 등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에 미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 北 ‘남측에 회담결렬 책임’ 대내선전 열올려(2/10, 연합뉴스)
  -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오전 ‘남조선과 더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북한군 대표단의 ‘공보’를 발표한 이후 11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정규 뉴스 시간에 A4 4장 분량이나 되는 공보 내용을 그대로 모두 11차례나 재방함.
  
- 北아태위, 여야에 ‘남북대화 제의’ 서한 보내와(2/11, 연합뉴스)
  -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남한의 4개 여야 정당에 서한을 보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공식 제의함.
  - 한 특송전문업체를 통해 이들 정당 앞으로 걸표지를 포함, A4 용지 15장에 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각 당 관계자들이 전함.
  - 이들 서한은 각 정당 앞으로 내용을 달리하는 2장 분량의 ‘2월2일자’ 서신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호소문 등 북한이 올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3건의 문건을 포함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같은 취지의 서한을 지난 2월2일 팩스로 전달받았다고 밝혔고, 국회에는 아직 서한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6자회담전 엄정한 ‘北UEP 대응’ 선행돼야”(2/13)

-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북한 우리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UEP는 심각한 도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처가 있어야 6자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도발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협상을 하는데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북측으로 하여금 협상을 오·남용하게 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며 “도발을 통해 협상을 끌고 가려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해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지난 10~11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이 UEP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속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중국과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앞으로도 5자간에,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중국이 다음 달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것이 UEP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자기한테 맞춰서만 하기 어렵다는 역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위당국자는 이어 “위 본부장의 방중시 우리는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해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의 식량생산 감소가 대북 지원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종래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중국의 식량 감산이 대북지원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 ● “中, 대북제재위 ‘UEP 보고서’ 채택 반대”(2/13)

-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북한 우리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북한 UEP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장선으로서 안보리 차원의



공론화 자체를 피하고 관련 논의를 6자회담으로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중국이 UEP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어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은 UEP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격규정과 직결돼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UEP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안보리 상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UEP 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했음.
- 이 보고서가 공식문건으로 채택될 경우 향후 안보리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채택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참고문건에 그치게 된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임.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함.
- 미국은 이 보고서를 정식문서로 채택해 이를 추후 안보리 대응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상임이사국 5개국(P5)을 중심으로 비공식 회동이 잇따르는 등 관련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위성락 “中, 北 UEP 안보리 논의 동의안해”(2/11)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관련, “중국은 안보리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 본부장은 이날 오후 8시께 1박2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그러나 (안보리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강조했다기 때문에 서로 이해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9일 결렬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회담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남북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위 본부장은 이번 방중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고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소식통은 “중국은 6자회담을 가급적 빨



리 재개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남북관계가 잘돼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동의했다”며 “앞으로 UEP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계속 강조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 中, 北 UEP 6자회담내 처리입장 ‘고수’(2/11)

- 중국은 북한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측은 기존의 북한 UEP에 대한 북핵 6자회담내 처리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측은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혀 그 처리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기대됐으나, 우리 측의 안보리 상정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1일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함께 북한 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서 올바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의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3시간 넘게 이뤄졌다. 이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할 때 중국이 북한 UEP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 그는 그러나 “(과거 북한의 UEP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했던)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북한 UEP 등을 포함한 모두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지만 서로 이해가 높아진 것에 의미를 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중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우리 측은 중국측에 8~9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중국측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를 지속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했다.
- 우리측은 또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여건 조성을 통해 북핵 6자회담으로 가지는 ‘프로세스’를 설명했다며 중국측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위성락 방중 이틀째..장즈쥘.류제이 회담(2/11)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중 이틀째인 11일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장과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위 본



부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들과 회동해 북핵 6자회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위 본부장은 베이징(北京) 도착 첫 날인 10일 오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했음. 이 자리에는 우리측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배석했음.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우리농 농축프로그램(UEP), 남북대화 등의 일련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제반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기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북한 UEP 문제와 관련,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그와 관련한 논의는 북핵 6자회담 테이블에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위 본부장은 류제이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회담한후 귀국할 예정임.

#### ● 위성락 베이징 도착..우다웨이와 회담(2/10)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1박2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음. 위 본부장은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이날 오전 10시 55분(한국시간 오전 11시 55분)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귀빈실을 거쳐 30여분 후인 오전 11시27분께 주중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차량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음.
- 그는 공항에서 취재진이 방중 이유를 묻자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과 해오던 협의를 계속하려는 취지에서 왔다”면서 “근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한간 접촉도 있었고 해서 그런 배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논의하려 한다”고 답했음.
- 북한의 UEP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 당시 미중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으나, 북한 UEP 문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를 북핵 6자회담 테이블에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따라서 북한 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우리 측은 위 본부장의 방중을 통해 대중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위 본부장은 아울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됨.

#### ● 위성락 “中과 北우리농농축 안보리논의 협의”(2/10)

-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북한 우리농농축 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



- 보장이사회 논의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국 방문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중국과)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오전 10시께 출국해 오후에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하고 11일에는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다른 중국 당국자들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임. 특히 이번 방중 기간 북한 UEP 문제의 안보리 대응에 관한 중국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됨.
  - 위 본부장은 “근래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갈래의 논의가 있었다”며 “미·중 정상회담 등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인 북핵 문제와 UEP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남북 간에도 대화 노력이 있었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더 이상 남한과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그런 말을 자주 해왔고 그러다가 태도가 180도 바뀌기도 한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음.
  - 위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 회담에서 대북 대화와 제재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대화와 제재 양쪽에 비슷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음.
- **美의회 “성급한 6자회담 재개 안된다”(2/10)**
-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싹트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미 간 대화 조짐에 대해 미 상원의 주요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가 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북한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6자회담 재개에 나서지 말라는 것임.
  - 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존 카일 의원과 국방위 소속의 존 매케인 의원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3명은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음. 카일과 매케인은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에 속한 핵심 의원들이며,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리버먼은 민주당에 큰 영향력이 있음.
  - 연합뉴스가 9일 입수한 이들이 지난 3일 클린턴 장관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당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사실상 북한에 제시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6자회담을 열지 말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음.



-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해 12월 6일 회담에서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올바른 기준을 정확히 설정했다”면서 “그 기준은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이 먼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의원들은 이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증명했다고 우리와 한국, 일본이 합의할 때까지 또 다른 6자회담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들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방한시 기자들에게 ‘6자회담 재개전에 북한이 충족해야 할 조건을 내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의원들은 “보즈워스 대사의 언급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이 설정했던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부터의 정책적 전환으로 동맹국들이나 북한에 의해 오해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의회 소식통은 이번 서한 발송이 최근의 상황과 관련된 미 의회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 유엔 대북 제재위 23일 소집..北 UEP 논의(2/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오는 23일(뉴욕 현지 시간) 소집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7일 전했다. 이번 대북 제재위원회 소집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場)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북핵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외교소식통은 “이번 제재위 소집은 정기적인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북한 핵관련 상황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UEP 문제도 유엔 1718호 및 1874호 결의위반 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달 말 UEP가 이미 가동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정식문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12항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어 UEP 보고서의 정식 채택은 북핵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북한 UEP 문제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이 6자회담 내에서 다루자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격 추진을 하지 못하



- 고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이번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무대를 대신하는 대안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1718호 및 1874호 결의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성격규정과 함께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제재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됨. 이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이 조만간 북한 UEP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비공식 회동(일명 ‘코커스’)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대북 제재위원회 소집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2일 언론브리핑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場)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북핵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외교소식통은 “이번 제재위 소집은 정기적인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북한 핵관련 상황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UEP 문제도 유엔 1718호 및 1874호 결의위반 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달 말 UEP가 이미 가동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정식문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12항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UEP 보고서의 정식 채택은 북핵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북한 UEP 문제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이 6자회담 내에서 다루자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격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이번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무대를 대신하는 대안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1718호 및 1874호 결의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성격규정과 함께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제재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됨. 이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이 조만간 북한 UEP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비공식 회동(일명 ‘코커스’)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나. 미·북 관계

##### ● 백악관 “北, 진정성 안 보이면 추가 고립”(2/13)

-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각)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건설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의 고립



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빠르게 결렬된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이런 대화들을 하기 위한 진정성이 진짜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고 밝혔음.
- 그는 거듭 “이번 주 초 대화가 결렬됐을 때 그들(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로 들어가려는 진정한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추가적인 북한의 고립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가 6자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그들의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는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의 ‘의식있는 결정’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약속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이에 진지한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 “美정부, 작년 대북수출 310만 달러 승인”<VOA>(2/12)

-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허용한 것은 모두 18건에 미화 310만 달러 규모로, 인도적 지원물품이 대부분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2010 회계연도에 허용한 대북 수출 18건 가운데 15건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품이었고 나머지 3건은 휴대용 발전기 등이었음. 앞서 2009 회계연도에는 23건, 2천만 달러의 대북 수출이 승인됐는데, 당시에도 값 비싼 인도적 지원물품이 포함돼 액수가 커졌음.
- VOA는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다양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담요, 신발, 난방용 연료와 의약품, 농산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대북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美보고서, ‘北핵보유국 불인정’ 왜 뺐나>(2/11)

-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0일 공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미 행정부 방침이 기술돼 있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음. DNI는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정보사항을 취합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직접 혹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 및 테러집단 등을 1년 단위로 평가, 연초에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해 오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서도 알카에다가 테러리즘 부문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혔고,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는 북한과 이란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지목됐음. 올해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확산 위협이 동아시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등 전체적인 내용에서





- 최근 2년간의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었음.
-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인 학자들에게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의심해 왔던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 주목할 점은 올해 보고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제외하고는 2010년 보고서의 내용을 답습하면서도 유독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용’ 원칙은 기술하지 않은 것임. 말로만 무성했던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이 공개돼 핵확산 위협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던 문장이 통째로 빠진 것임.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 행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 이 대목이 빠졌다고 해서 미국의 원칙과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차 명문화됐더라면 북한에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 ● 美 “北, 진정성 보여줄 기회 상실”(2/10)

- 미국 국무부는 9일 남북한 군사실무회담이 북한의 퇴장으로 결렬된 데 대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과 관련, “북한 대표단이 퇴장한 것이 어떤 의미 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힘들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과 같은 회담은 북한의 도발에서 비롯된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vehicle)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지적했다.
- 또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태도때문에 실무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한국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향후 이번 회담 결렬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물론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리고 난 후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계속 파악 중”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만일 식량지원이 재재된다면 식량 수요량 파악,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 문제, 식량 배분 감시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임을 그동안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 “특히 정작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된 식량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상에서 식량 분배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식량난은 비단 좋지 않은 기상 상황과 더불어 북한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단순히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킹 특사 “대북 쌀지원, 정치적 고려 없다”(2/9)

-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대북 쌀지원과 관련해 “수요에 기반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요기반이 첫번째 원칙이고 두번째로 균형의 원칙, 세번째로 투명성의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 쌀지원의 3대 원칙을 분명한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북한의 실제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객관적 수요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재원의 적절한 균형과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고려해 대북 쌀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 쌀지원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과 전반적인 북한 식량상황, 쌀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 지원은 인도주의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으로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음.
- 킹 특사는 이어 “균형의 원칙은 (북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수요도 함께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투명성의 원칙은 어떤 지원을 했을 때 배분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원됐을 때 가장 필요하고 취약한 계층에 가는지를 모니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는 ‘북한이 식량배분 모니터링을 약속할 경우 쌀지원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만약 결정이 내려진다면 3대 원칙이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이나 미국내 비정부 기구(NGO) 등에 대해(쌀지원 조사) 요청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미국의 정부 대표단을 북한에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쌀지원 요청 배경에 대해 “북한은 우리가 다루는 국가 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로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고 그런 점이 가장 좌절스러운 부분”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관



- 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그는 이어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북한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상황을 가진 국가”라며 “현재 미국은 상당히 개탄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킹 특사는 또 6자회담 재개시 북한 인권문제의 의제화 여부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별도의 관련있는 그룹에서 북·미 양자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북·미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입장이고 6자회담이 재개돼 다른 많은 분야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킹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관계 개선이 북미관계의) 전제조건 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북한의 인권은 북미 양자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향후 방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초청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이집트 사태가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보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서 정보가 북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특히 “방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보 접근이 되도록 지원하거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보독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교류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음.
  - 킹 특사는 탈북자 및 국군포로 처리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킹 특사는 이밖에 북한 고위급 관리의 망명소식에 대해 “최근에는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음.

#### ● “北, 보즈워스 방중 당시 대화 타진”(2/8)

-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초 방중 당시 대화 의사를 타진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신문은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5일과 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중 시기에 맞춰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파견해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 타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보즈워스 특별대사의 베이징 체재 일정이 짧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유럽에서 미국과 민간 레벨의 대화도 모색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 체제 강화와 후계 체제의 정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미북 대화와 6자 회담의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의 움직임에 경계감을 갖고 있음. 북한은 미국 싱크탱크의 중개로 다음달 말께 유럽에서 비공식으로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등 관계국에 이 대화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북한은 미국의 과거 정부 당국자 등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현될 경우 외무성의 이근 미주국장 등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중·북 관계

##### ● 북한·중국 치안총수 평양서 회담(2/13)

-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중국의 명젠주(孟建柱.63)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13일 평양에서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음.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주 부장과 최중화 인민보안부 부부장 등이, 중국측에서 명 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음.

##### ● 中 명젠주 방북..탈북자·출입국관리 논의(2/13)

- 중국의 명젠주(孟建柱.63)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13일 방북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명 국무위원은 2박3일간 북한에 머물고서 15일 다음 순방지인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최중화 인민보안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명 국무위원을 맞았다고 보도했음.
- 명 국무위원의 방북은 2009년 12월 북한의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베이징(北京) 회담, 지난해 8월 류징(劉京) 중국公安부 상무부 부장을 단장으로 한公安대표단의 방북에 이어 양국간 교류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명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명 국무위원은 방북기간에 탈북자 문제와 북중 경협 활성화에 따른 출입국 관리 분야와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류징公安부 부부장 방북 당시 변경지역 범죄단속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하고 국경범죄 척결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힌 바 있어, 명 국무위원의 방북으로公安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국경에서는 지난해 6월 4일 새벽 압록강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



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면 각종 생계성 절도 및 강도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공안협력 강화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명 국무위원은 지난해 3월 18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방한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음. 회담에서 유 장관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명 국무위원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의하겠다는 정도의 뜻을 표명했었음.

### ● 中, 北 최대철광 무산 있는 철도 연내개통(2/10)

-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의욕적인 중국이 북한 최대 철광산지인 함경북도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의 연내 개통을 추진하고 있음.
- 연변인터넷방송은 10일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해상 통로 다각화와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에서 북한의 남평을 거쳐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와 허룽-남평-무산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허룽-남평-무산 철도는 올 연말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 운송 확대를 위해 중국 철도부와 지린(吉林)성이 11억9천만 위안을 들여 지난해 10월 착공한 이 철도는 총 길이가 41.68km에 불과하지만 북한 최대 철광산지인 무산을 연결함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지하자원 개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이 철도는 또 중국이 라진항에 이어 동해 진출의 해상 통로로 삼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까지 연장될 계획이어서 북-중 경협을 주요 교통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무산 광산은 730억t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임. 통화(通化)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해마다 120만t의 철광을 들여오고 있으며 허룽-무산 철도가 완공되면 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최근 중국과 무산 광산 추가 개발 등 지하자원 합작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 식량난 직면 北, 지하자원 개발 '안간힘'(2/9)

-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 감소와 국제사회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지하자원 수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합작 개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 함경북도 경원군의 탄광과 온성군 동(銅)광산 개발을 추진 중임. 경원에는 농포탄광과 하면탄광, 훈용탄광 등 3개 탄광에 총 2억t가량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경원은 중국 훈춘(琿春)에서 불과 9.2km 떨어진 데다 북한 라선지역 과도 100km 거리에 있어 중국으로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석탄을 훈춘으로 반입하거나 라진항을 이용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하기가 용이해 합작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연변(延邊)의 한 기업이 이미 2009년 북한 조선승리경제무역연합회사와 탄광 합작 개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북한 중앙당국으로부터 합영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1천500만 달러를 들여 경원 탄광에서 연간 100만t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임.
- 이 업체는 또 북한의 제의에 따라 동 2억4천만t, 몰리브덴 1만2천t, 황금과 은이 각각 49t, 146t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성군 강안리의 대규모 동광산 개발도 검토하고 있음.
- 중국의 중건 철광그룹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북한 최대 규모인 양강도 헤산의 광산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2006년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 채광 설비 제작에 나섰다 2009년 7월 설비 제조를 중단, 광산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의 갈등설이 흘러나왔으나 북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개발을 재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업체는 헤산 광산에서 주로 연과 아연을 생산해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 상무부와 오는 15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한 국내 대북 소식통은 이번 협정에서 금과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된 북한의 무산광산과 희토류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 화폐 개혁 실패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된 데다 잇단 자연재해와 국제사회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음. 지난달 15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국부 유출을 우려해 한때 지하자원 수출 규제에 나섰던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은 각각 410만t과 160만t 이상으로, 석탄은 전년보다 14% 증가했음.
- 특히 신의주 등 북부지역의 홍수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지난해 하반기의 지하자원 수출 물량이 상반기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 “北 무역상 베이징서만 1천명 외화벌이”(2/9)

- 국제적인 제재로 고립된 북한이 식량 조달 등을 위해 중국에 무역상인을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 각 부처와 군 산하에 300개 정도의 무역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 파견한 무역상은 베이징에 약 1천명, 상하이에 약 600명, 지방 거점 도시별로 100~200명씩임.



- 이들 무역상은 거래를 통해 번 돈을 1인당 연간 5천~6만 달러 정도 본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거래비용이나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음.
- 북한에서 무역상은 주민들이 동경하는 직업임. 해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임. 과거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부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무역상의 시대가 됐음.
- 이들 무역상은 엄격하게 선발됨.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며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 무역상이 되기 위해 뇌물이 동원되기도 함. 무역상으로 적합한 인물이 부상하면 무역회사가 스카우트를 하며, 국가안전보위부와 외무성 등 여러 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됨.
- 이들 무역상은 매일 저녁 북한 당국이 중국의 각 도시에 둔 ‘사무소’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거래실적과 활동 등을 보고하며 토요일에는 사무소에 모여 당의 지시와 정책을 학습함.
- 한편 아사히신문은 북한 당국이 작년 후반 석탄과 은 등의 광물자원 수출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쌀과 옥수수 수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2007년 자원 고갈을 우려해 광물자원의 수출규제에 나서 석탄과 금, 은, 아연 등의 수출을 억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08년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은 32%, 은 수입은 84%, 아연 수입은 85% 각각 격감했음.
- 하지만 최근엔 규제를 완화해 대량의 광물을 방출하고 있음.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은 작년 8월에만 7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상반기 전체 수출(6천800만 달러)을 상회했음. 신문은 북한이 전략물자인 광물자원을 방출해서라도 식량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서명(2/10)

-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음. 이로써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음.
-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



- 런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음.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 형태임.
-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서한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또 서한에서는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과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의 병존을 전제해 두 조약 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외교부는 부연했음. 이어 외교부는 이번 합의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국회 측과 협의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완전 독립된 조약인 만큼 각각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임. 하지만 여야 정당 일각에서는 기존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추가 합의인 만큼 병합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미 FTA 내용 못지않게 비준절차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별도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든, 기존 동의안과 병합해 처리하든 방법이 결정되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당정이 전날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유럽연합) FTA를 먼저 처리한 뒤 한·미 FTA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임.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됨.

#### 나. 한·일 관계

##### ● “韓-日 민간인 징용자 유골 반환협상 정체” <日紙>(2/9)

-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숨진 민간인 노무자 유골 반환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말 현재 일본 전역의 사찰 등지에 보관된 민간인 징용자 유골 2천662명분에 관한 정보를 취합했음. 일본측은 이중 약 60%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817명을 한반도 출





- 신 징용자로 추정했고, 이같은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했음. 한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까지 42명에 대해 유족 확인을 끝냈지만, 이후 반환 협상이 벽에 막혀 유골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신문은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한국측과의 교섭에 대해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측에 따르면 일본측이 유골을 반환하기 전에 정부 주최로 추도회를 여는 걸 거부하는 것이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한일 양국은 2004년 12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징용자 유골 반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음.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군인·군속 징용자 219위를 반환했지만, 민간인 징용자 유골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징용한 것은 민간기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본 정부가 추도식을 주최하는 등 예의를 표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한일 군수지원협정 올가을 체결 목표” <교도>(2/7)

- 일본이 올가을까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다카미자와 시게노부(高見澤將林)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이날 여당인 민주당의 방위부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음.
- 통신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자위대의 협력에 대해 한국 내에 신중한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협정 대상에서 ‘한반도 유사시’는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인도적 지원, 재해 구조, 수색 구난 훈련을 상정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만나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했음.

다. 한·중 관계

● 中, 남북대화 일관되게 지지(2/10)

- 중국이 “남북대화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8~9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 같이 대답하면서 “이제 대화와 접촉의 시작인 만큼 서로 마주 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에 대해 묻자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과 회견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유관 각측이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와 협상으로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9.19 공동성명의 각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 中, 韓 서해도서 전력증강 우회 경고(2/10)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우리 정부의 해병대 병력증강과 이 병력의 서해 배치 계획이 북한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음. 인민일보는 10일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을 통해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음.
- 우선 인민일보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남한이 해병대 1천200~2천여 명의 증강을 추진중이며 이들 대부분은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우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되며 일부는 오는 4월께 창설될 서북해역사령부에 배속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아울러 이는 서북도서의 작전개념이 북한군의 기습 상륙저지라는 방어적 개념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남한 군 당국자의 분석도 곁들였음.
- 인민일보는 남한 군 당국은 작년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군 전력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해병대 증강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후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에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비쳤음.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서해도서에 대한 남한의 군사시설화에 대해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런 행위가 어렵게 조성된 남북간 대화분위기를 깨고 한반도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인민일보는 이어 남한은 작년 최악의 위기사태 과정에서 긴장 고조와 갈등 격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하며 다시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신문의 논설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음.
- 인민일보는 아울러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도 않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밝힌 한 평양 시민의 발언을 전했다.

#### 라. 미·일 관계

##### ● 美 전 DNI 국장 “日 헌법 개정에 찬성”<교도>(2/7)

-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장관급 인사가 군대 보유나 전쟁 참가를 막는 일본의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양쪽의 균형 있게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동



맹이 필요하다”며 “나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방위력을 증강하는데 전면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일시는 분명하지 않음.

- 블레어 전 국장은 “가령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일본이 헌법(의 제약)을 이유로 레이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낡은 이야기”라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을 절충하기 위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 시절부터 취해온 ‘경무장, 경제중시’ 노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약간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이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떠맡고, 일본은 (미군의) 주둔 경비를 내는 관계는 (냉전기인) 1955년이라면 몰라도, 2011년의 동맹관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마. 미·중 관계

##### ● 美 에너지안보 그룹, 내달 중국 방문(2/10)

- 미국 기업인과 군 출신 인사로 구성된 에너지 안보 단체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함. ‘에너지 안보 리더십 협의회’ 회원들은 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석유 안보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군장성 출신인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9일 전했다.
- 블레어 전 국장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양국 인사들이 적정 가격으로 석유를 확보하는 문제 등 석유시장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에너지 리서치 연구소와 세미나를 열고 ‘신 에너지 개발과 양국간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협의회 모그룹인 ‘미국 미래 에너지 확보’(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 대변인이 전했다.
- 에너지 안보 리더십 협의회는 최근 미국 운송시스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높은 석유 의존도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협의회에는 번 클라크 전 해군참모총장, 존 핸디 전 공군 수송사령부 사령관 등 군 출신 인사와 허버트 켈러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회장, 에릭 슈워츠 골드만삭스 전 CEO 등 기업인이 포함돼 있음.

##### ● 가이트너 “中, 위안화 절상 움직임 더디”(2/8)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위안화 절상 움직임이 아직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언론인 및 경제학자 등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중국은 현재 매우 신중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위안화 절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주장했다.



-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은 수출만으로 지속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편 위안화 절상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화 시스템 구축”이라면서 “특정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무역적자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더욱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 바. 중·일 관계

### ● 中 “日, 다표위다오 배상요구 권리없다”(2/12)

- 중국이 다표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어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일 정부가 1천430만 엔을 배상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그럴 권리가 없다며 정식으로 거절했음. 중국 외교부의 마차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2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
- 마 대변인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표위다오 사건과 관련해 중국 선장에게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영토로 일본 측은 충돌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배상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 ● <日, 다표위다오 배상요구..중·일 감정싸움?>(2/11)

- 일본은 작년 9월 다표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중국인 선장 잔치슝(詹其雄)에게 1천430만 엔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음. 그러나 중국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배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다표위다오 배상문제를 놓고 중·일 간 감정싸움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음.
-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10일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손상된 순시선 수리비 1천239만 엔과 수리기사 파견 비용 등을 포함, 1천430만 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잔치슝 선장 개인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고 중국언론들이 보도했음.
- 중국언론들은 이와 관련 “북방도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이 중국과의 영토갈등에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소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보였음.
- 중국인 선장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서 공식적인 배상을 청구한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로 중국언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닌오위다오 배상문제에서 중국은 “중국 어선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 조치는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으므로 일본은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따라서 이번 배상금 청구를 계기로 닌오위다오 사건을 둘러싼 중·일간 감정싸움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일 양국이 최근 전략적 대화를 재개키로 하는 등 닌오위다오 사건 이후 악화된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닌오위다오 배상 문제는 잠시 소용돌이를 일으키다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임.
- 일본이 잔치승 선장 개인 앞으로 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도 배상금 문제를 국가 간 사안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됨.

#### 사. 일·러 관계

##### ● <日 ‘경제로 북방영토 해결’ 전략 실패>(2/12)

- 러시아 방문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문제를 진전시켜보려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의욕적 행보가 무위에 그쳤음.
- 마에하라 외상은 11일과 12일 이틀간의 러시아 방문에서 경제협력이라는 당근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 쿠릴열도 4개섬 반환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자세는 강경하기만 했음. 러시아는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에서 남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시고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의 일본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은 12일 마에하라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주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영토문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경고했음. 일본이 계속 남 쿠릴열도 4개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한 영토 문제 교섭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지난 11일 있었던 마에하라 외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서로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했다는 후문임. 마에하라 외상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와 의 면담을 기대했으나 무산됐고, 간 총리의 러시아 방문 문제 협의도 벽에 부딪혔음.
- 양국의 외교관계에 결정적으로 금이 간 것은 지난 7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북방영토의 날’ 행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작년 11월 쿠릴열도를 방문에 대해 “용인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부터임.
- 간 총리는 작년 9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닌오위다오<釣魚島>) 충돌과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이후 저자세



외교 논란이 계속되자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실익 없이 러시아의 감정만 긁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음. 양국 외교관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남 쿠릴열도 반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임.

- 요미우리신문은 13일 마에하라 외상이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영토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러시아의 기본 방침은 경제협력과 영토문제는 별개라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음.
- 러시아는 과거 일본에 남 쿠릴열도 2개섬을 반환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협력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극동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눈을 돌려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일본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방침임.
- 다급한 쪽은 일본이다. 영토 반환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하다가는 러시아 극동 개발의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 日 외상 “북방영토는 日 영토’ 입장 확고”(2/10)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0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와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이 “절대적으로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마에하라 외상은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에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법하에서 북방영토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러시아의 점유는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러시아) 고위 관리가 거기에 얼마나 가든, 누가 가든, 군사력을 증강하든 감축하든 상관없이 (러시아의 주장에 대한) 법적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음.

#### ● 메드베데프 “쿠릴열도에 추가 무기 배치”(2/10)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무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같이 지시하며 “우리 영토의 분리할 수 없는 지역”에 러시아의 존재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국방장관, 지역개발부 장관과의 회합에서 “그곳(쿠릴열도)에 추가로 배치될 무기는 우리 영토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의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에게 “확실하게 모든 필요한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며 “(무기의) 이동을 실천에 옮기고 필요한 조직 관련 조치도 완수하라”고 말했음. 지난주 쿠릴열도의



- 군부대를 시찰, 일본을 격분시켰던 세류듀코프 국방장관은 이달 말 까지 쿠릴 열도에 추가 배치할 무기를 파악,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음.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이고르 바리노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을 제외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가진 적은 없는데다 북한 역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배치되는 무기는 방공시스템과 중거리 미사일 등 방어적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쿠릴열도에 무기를 추가배치기로 한 것은 11일로 예정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임. 마에하라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기간에 태평양 지역에 액화천연가스 공장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러시아의 에너지 대기업인 가스프롬은 지난해 일본 측과 공장건설 타당성 조사를 진행기로 합의했음.

#### ● 러시아, 日에 국기 모욕 수사 요구(2/9)

- 러시아 정부가 일본에 자국 국기 모욕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NHK방송이 보도했음.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일 도쿄에 있는 주일 러시아 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북방영토의 날’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러시아 국기에 낙서를 한데 대해 국기 모독이라며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음.
-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과 러시아 대사관의 안전 확보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
-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관계는 지난 7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작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삼아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격렬하게 비난한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간 총리의 발언에 발끈하고 있고 ‘국기 모독’ 문제도 일본 정부가 국내의 반 러시아 감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
-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쿠릴열도의 4개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인 만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 총탄 배달돼(2/8)

-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7일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총탄이 배달됐음.
- 일본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전달된 우편물에는 화약이 들어 있지 않은 7cm짜리 소총탄과 함께 ‘북방영토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메모가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음.



### ● 日총리 “러 대통령 북방영토 방문은 폭거”(2/7)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작년 11월 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 방문을 ‘폭거’라고 비난해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7일 도쿄에서 열린 ‘북방영토 반환 요구 전국대회’에 참석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을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한 뒤 “북방영토 문제는 일본 외교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간 총리가 이처럼 강한 톤으로 러시아를 비난한 것은 야당 등으로부터 영토문제와 관련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간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강한 의지를 갖고 러시아와 교섭을 추진하겠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도 더욱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는 10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일본 고유의 영토를 가능한한 조속하게 반환토록 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 일본 정부는 1855년 2월 7일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에서 쿠릴열도 4개 섬이 일본 영토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정해 해마다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를 방문했으며, 지난 4일에는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쿠릴열도를 찾아 일본의 반발을 샀음. 러시아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쿠릴열도를 지도층이 방문하는 것에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영토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음.
-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5일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인위적으로 강조되는 ‘열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러-일 간 대화에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형성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 지도부의 열도 방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측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의 쿠릴 방문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적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반복한 것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 아. 기 타

#### ● 美합참 “北核 동북아 안정 위협”(2/9)

-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핵능력과 불안정한 권력이상이 동북아시아 정세와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음. 미 합참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강한 경계감도 표출했음.





- 미 합참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USA)’에서 “아시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잠재적으로 불안한 권력 이양이 지역의 안정과 핵 비확산 노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노력을 지지하는 변함없는 동맹임이 입증됐다”면서 “북한이 지역의 안정에 도발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밝혔음. 이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음.
- 미 합참은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 강화에 공조하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역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명기했음.
-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보였음.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의 전략적 의도와 우주공간, 사이버공간 및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단호한 권리 주장에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혀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발전과 이것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음.
- 그러면서도 미국은 해적 타도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 미 합참은 인도 및 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해 중국을 견제했음. 보고서는 아세안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국가의 영토보전과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합참이 발표한 국가군사전략은 미군에 대한 지침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2004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됐음. 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포함해 테러 척결에 초점을 맞췄던 2004년 보고서를 뛰어넘어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글로벌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동맹국과 함께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명명된 새로운 전략은 치안부대뿐만 아니라 외교와 비정부기구(NGO) 등도 미래의 안보 도전에 함께 대처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미군을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담겼음.
-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서문에서 “이 보고서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 공격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



과 함께 군사력이 다른 힘의 요소와 협력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멀린 의장은 “민간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복잡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